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년 4월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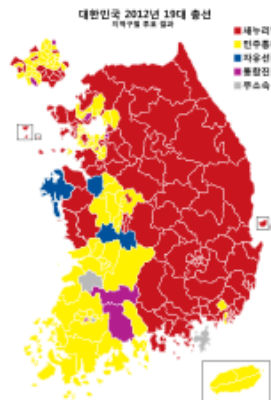
정한울_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 4. 25

1. 4.11 총선결과 : 박근혜의 정치적 승리, 박빙 경합구도 유지

1) 총선평가 : 새누리당의 압승? 사실상 야당의 승리?

투표율 54.3%,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으로 새누리당이 단독과반의석에 확보하며 “정권심판”을 내세웠던 야당의 도전을 물리치고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선거가 끝나자 대부분 언론은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의 약진을 근거로 “새누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라고 평가했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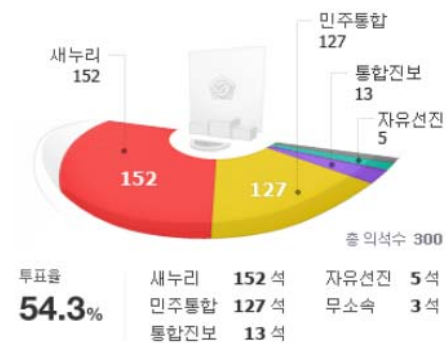
[그림 1] 지역구 당선자 정당 구분 및 18대/19대 선거결과



그림출처 : 위키백과(<http://me2.do/5AxwTj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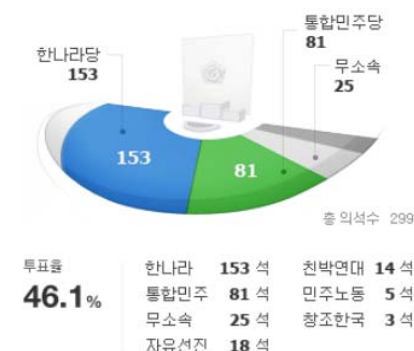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임기4년 2012.05.30 ~ 2016.05.29
선거일 2012년 4월 11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임기4년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선거일 2008년 4월 9일



그림출처: 네이버(<http://me2.do/GJQL3ou>)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개표당일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수도권에서의 압승과 전체 지역구 득표수의 우세를 근거로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고 문성근 당대표 권한대행은 “야당의 오만 때문에 졌다는 평가는 조중동이 씹는 논리”라며 선거패배론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있다.

필자는 선거 10일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4.11 총선은 높은 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현 야당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비토층이 다수를 점하면서 여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팽팽한 박빙의 대결구도를 예상한바 있다(EAI 여론브리핑 111호). 마치 선거결과는 이러한 예상과 달리 대부분의 언론보도처럼 새누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처럼 보인다. 그럼 반대로 야권 일각에서 18대 총선과 비교하여 약진했다는 점, 수도권 압승을 근거로 사실상 야권의 승리였다는 평가는 정당한가? 이번 선거에서 힘의 균형추가 무너진 것일까?

2) 두 가지 착시 현상

새누리당 압승의 착시 현상

실제 선거직후 실시한 2차 조사에서 지역구에 투표한 정당, 비례제 정당 투표 비율을 1차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예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2, 그림3). 각 정당 지역구 및 비례제 투표의 득표율을 종합해보면 1차 패널조사에서 예측하고, 실제 2차 패널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야 팽팽한 경합구도였음을 보여준다.

의석수를 종합해보더라도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달성했기는 했지만 여야 의석수는 팽팽하다. 더구나 선거 직후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개혁 법안이 합의되는 등 당장 19대 총선의 경우 여야 협력 없이 원활한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이번 조사에서 지역구 투표 지지율을 보면 이번 조사에서 42.8%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42.3%, 통합진보당 4.7%로 여야가 팽팽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하면 오히려 야권의 표가 더 많다.¹⁾ 비례제 투표 선호의 경우 패널조사에서 새누리당 41.9%, 민주통합당 35.3%, 통합진보당 14.8%로 나타나 실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비례제 정당투표 결과인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5%, 통합진보당 10.3%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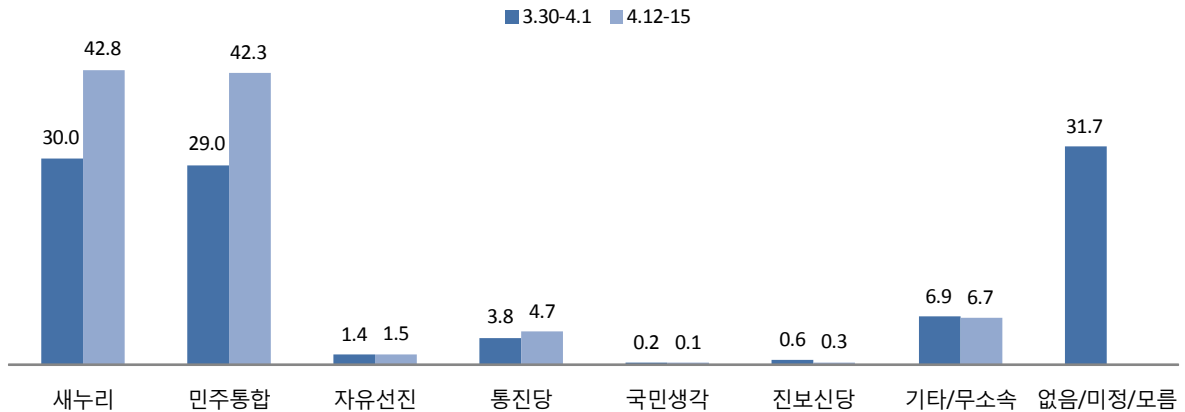
특히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둔 충청, 강원에서도 지역구 투표에서 전체 득표율을 보면 야권에 뒤지고 있으며, PK 지역의 경우 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적었지만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36.8% 내외까지 허용했다는 점을 보면 “압승”으로 해석하기 어렵다(표1).

1) 선관위의 지역구 득표 집계를 보면 새누리당이 총 932만여표, 야권연대(민주당+통합진보당)이 944만여표로 12만표 가량 오히려 야당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야권, PK서 35% 득표 이대론 박근혜 대선 쟁”(조선일보 2012/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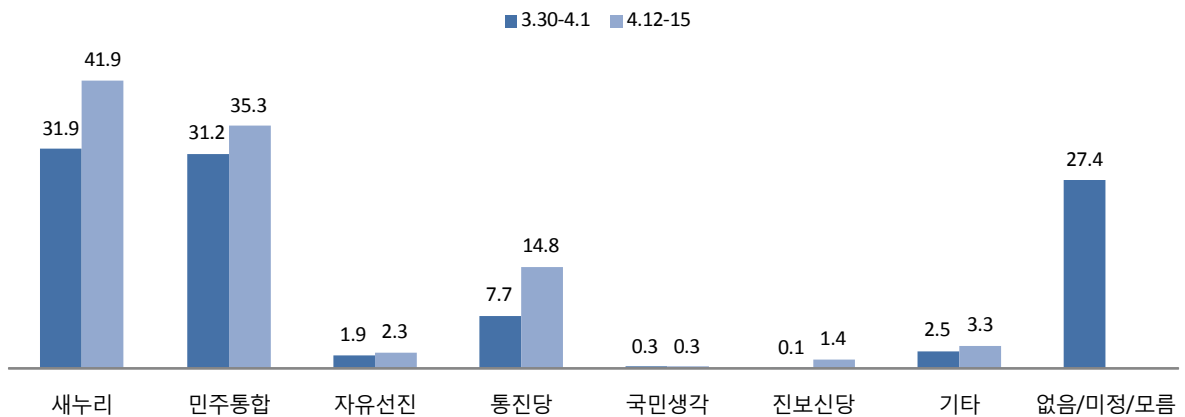




[그림 2] 지역구 투표 선호변화(%)



[그림 3] 비례투표 지지 정당 변화(%)



야당 수도권 압승, 후보단일화 효과의 착시현상

지역구 의석수 분포에서 서울 새누리 16석, 민주당 30석, 통진당 2석으로 야권이 두 배 의석 차지, 경기에서는 새누리 21석, 민주당 29석, 통진당 2석으로 10석야권 우세, 인천에서는 새누리 6석, 민주당 6석으로 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새누리 44석, 민주당 65석, 통진당 4석으로 야권의 승리는 확실하다.

비례 투표 정당투표율을 보면 서울/경인지역 모두 정당득표율 1위 정당은 새누리당으로 모두 42% 대의 고른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의석수에조차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했다는 평가는 야당이 서울에서의 압도적으로 많은 당선자를 내면서 발생한 착시현상인 셈이다. 참고로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호남 지역과 제주를 제외하면 정당 지지1위는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새누리당 수도권 득표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준다(표2). 특히 이번 선거처럼 충청 지역, 최근 야당 지지가 강했던 강원에서도 새누리당에게 우위를 넘겨줄 경우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을 합해서 4-5% 앞선 결과는 불안한 우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후보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통합진보당은 비례정당투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지역구 및 비례투표에서 얻은 두 정당의 지지율 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정당 지지율의 합산으로 새누리당 지지율을 넘어서 수도권에서 많은 당선자를 냈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후보 단일화를 했음에도 두 당 지지율 산술적 합을 뛰어 넘는 플러스알파의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지역별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 : 투표자 1479명 결과

광역	새누리 후보	민주 후보	통진당 후보	다른 정당	모름/무응답	전체
서울	44.5	45.6	2.8	4.9	2.2	100.0%
경인	42.4	47.8	3.6	4.8	1.5	100.0%
충청	40.2	42.8	3.1	12.2	1.8	100.0%
호남	4.6	60.4	14.2	19.8	.9	100.0%
대구경북	65.1	19.4	2.0	13.0	.6	100.0%
부산경남	53.1	30.9	6.9	7.1	2.0	100.0%
강원제주	46.0	42.9	-	9.1	1.9	100.0%
전체	42.8	42.3	4.7	8.5	1.6	100.0%

[표 2] 지역별 3당 비례투표 지지율(%) : 선관위 발표

비례	새누리	민통당	통진
전체	42.8	36.5	10.3
서울	42.3	38.2	10.6
부산	51.3	31.8	8.4
대구	66.5	16.4	7.0
인천	42.9	37.7	9.7
광주	5.5	68.9	18.6
대전	34.3	33.7	9.0
울산	49.5	25.2	16.3
경기	42.4	37.7	11.0
강원	51.3	33.5	6.6
충북	43.8	36.0	7.7
충남	36.6	30.4	6.8
전북	9.6	65.6	14.2
전남	6.3	69.6	14.8
경북	69.0	13.4	6.2
경남	53.8	25.6	10.5
제주	38.5	39.5	12.4





3) 새누리당 승리의 요인

보수층의 결집 · 민주당 지지 이탈 · 중도층에서의 새누리당 선전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무게추가 끝까지 경합국면으로 유지되면서도 결국 선거결과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당 지지층이 야당 지지층보다 더 높은 결집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같은 응답자 대상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패널조사의 장점을 살려 1차, 2차 지역구 후보 투표 선호의 변화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새누리 지지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85.9%가 실제 새누리당에 투표하고 14.1%만 이탈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77.1%만이 민주당 지지를 유지하고 22.9%는 이탈했다. 특히 지지의사를 밝혔다가 기권으로 돌아선 응답자 비율도 민주당 후보 지지층에서 높았다(민주당 후보 지지층의 7.3%, 새누리 지지후보 지지층 4.5%). 결국 높은 보수층의 결집이 새누리당 승리의 발판이 된 셈이다.

또한 1차 조사 당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부동층 중에서 36.8%는 새누리당을, 38.2%가 민주당을, 3.5%가 통진당을 지지하여 이러한 부동층이 크게 야권 쪽으로 쏠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차 조사에서 기권하겠다고 응답한 층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이 24.2%, 통진당 지지가 3.4%였고, 새누리당 지지는 19.7%에 그쳐 야당에 유리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적어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바꾸지 못했다.

[표 3] 1, 2차 지역구 투표 선호의 이동

		표 이동	2차 실제 투표 선호 (4.12-15)					
		⇒	새누리 후보	민주 후보	통진당 후보	다른 정당	기권	모름/무응답
1차 투표 선호 (3.30-4.1)	새누리후보 448명	지지이탈 14.1%	385 85.9%	23 5.1%	0 .0%	20 4.5%	20 4.5%	0 .0%
	민주후보 436명	지지이탈 22.9%	31 7.1%	336 77.1%	23 5.3%	12 2.8%	32 7.3%	2 .5%
	통진당후보 60명	이탈 63.3%	1 1.7%	32 53.3%	22 36.7%	1 1.7%	4 6.7%	0 .0%
	다른정당 87명	이탈율 56.3%	17 19.5%	19 21.8%	3 3.4%	38 43.7%	6 6.9%	4 4.6%
	부동층 445명	투표참여 90.6%	162 36.4%	168 37.8%	15 3.4%	47 10.6%	42 9.4%	11 2.5%
	기권 178명	투표참여 53.9%	35 19.7%	43 24.2%	6 3.4%	6 3.4%	82 46.1%	6 3.4%
	모름/무응답	-	4 30.8%	5 38.5%	0 .0%	2 15.4%	1 7.7%	1 7.7%
	전체	1666명	635	626	69	126	187	24
		전체	38.1%	37.6%	4.1%	7.6%	11.2%	1.4%

주: 1차 조사에서 지역구 투표후보 정당은 “투표의사층” 대상 질문이며 2차 조사에서는 투표했다고 응답한 응답자 대상 조사이다. 여기 제시된 수치는 1차 조사에서 투표의사가 없는 층, 2차 조사의 투표기권층을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임. 1차 조사 부동층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과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의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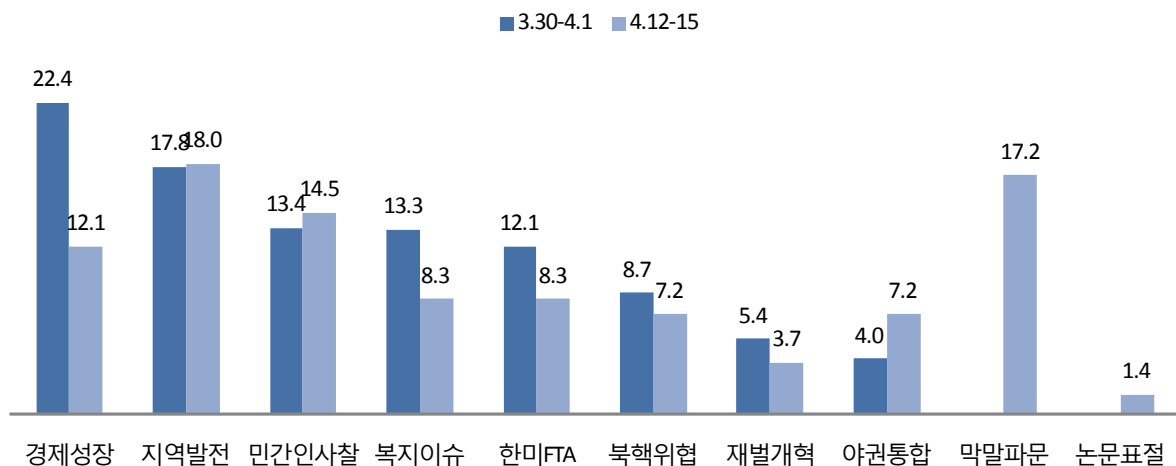
정권심판론의 잠복 : 여야 네가티브 공방과 정책대결의 약화

보수층은 결집하고, 야당 지지층의 이탈이 상대적으로 커진 데에는 막판 네가티브 공방의 효과로 정권심판론이 야권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패널1차 조사 시점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청와대-여야간 공방이 심화되었지만, 연이어 터진 김용민 후보 막말파문이 선거 막바지 최대이슈로 떠올라 민간인 사찰 파문의 확산을 막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사에서 막말파문을 투표 선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슈로 꼽은 응답은 17.2%로 지역발전 이슈 18.0%와 함께 선거이슈를 잠식했다. 막말파문 이후 야당 대응의 혼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야당이 올인하다시피한 민간인 사찰파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여론은 13.3%에서 14.5%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문대성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고려했다는 여론은 1.4%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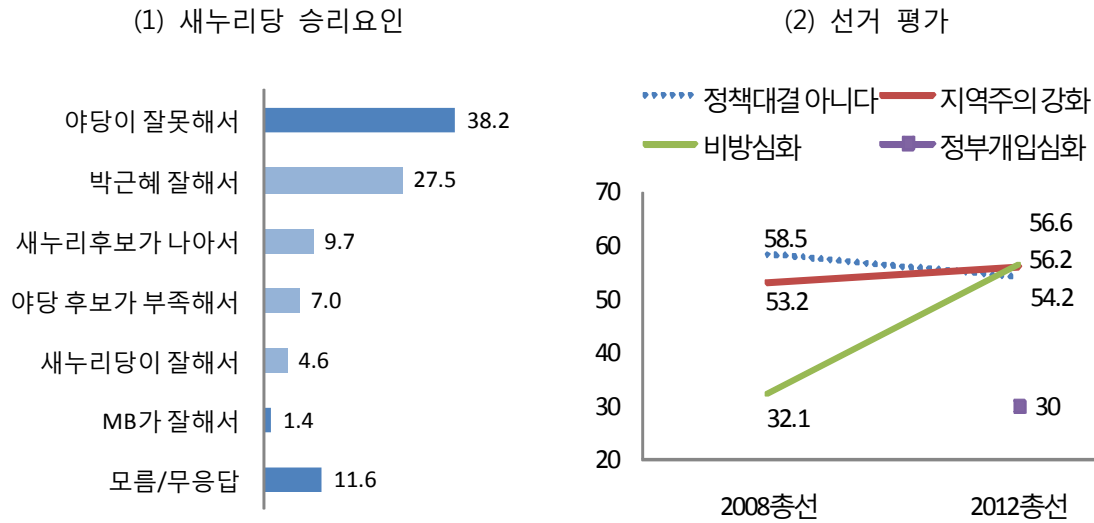
또한 1차 조사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제성장, 복지문제와 같은 이슈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애초 정권심판 정서의 근원으로 지적되어온 민생 및 사회경제 현안이슈를 부각시키는데 실패했다. 이전 총선과 비교하여 정책대결의 약화나 지역주의 강화에 대해서는 2008년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후보간 비방이 심해졌다는 평가는 32.1%에서 56.6%까지 높아졌다. 반면 대통령과 정부의 개입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은 30.0%에 그쳐 정책대결을 기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을 고조시킨 반면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구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림 4] 4.11 총선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이슈





[그림 5] 새누리당 승리요인 및 선거 평가 변화



새누리 승리요인 : 야당의 자업자득 38.2% VS. 박근혜 리더십 효과 27.5%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새누리당 승리 요인으로 “야당이 잘못해서” 38.2%,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 27.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야당후보 보다 새누리당 후보가 나아서” 나 “야당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보다 부족해서” 는 각각 9.7, 7.0%였고, “새누리당이 잘해서” , “이명박 대통령이 잘해서” 는 4.6%, 1.4%에 그쳤다. 야권은 선거전 체감경제의 악화, 권력형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권심판론이 고조되어 “선거전 야권의 압도적 우위 국면” 을 공천과정에서의 내부 혼선과 민간인 사찰파문 시 미숙한 대응으로 실제 득표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연초까지만 해도 100석도 어려워보였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맡아 당명개정과 당 정책노선의 변화, 선거공천 및 선거운동 전 과정을 지휘한 과정에서, 당의 개혁과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심판론의 예봉을 꺾는 데 성공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거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선거 전 1차조사의 정당지지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야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44.0%, 박근혜 리더십을 꼽은 응답도 20.0%였고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박근혜 위원장이 잘해서라는 응답이 40.4%, 야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무당파 층에서는 37.8%가 야당의 책임을, 23.8%가 박근혜 위원장의 역할을 꼽아 야당의 자중지란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환경 : 소선거구 다수제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팽팽한 대결구도가 실제 투표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4.11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정권심판론” 과 “여소야대” 라는 야권이 내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 불과 2월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목표 의식이 탄핵선거 때 얻은





121석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의 선전과 야당의 정치적 패배는 분명해 보인다.

실제 지지율에 비해 새누리당이 단독과반이라는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승리하는 소선거구제 다수제의 제도적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여당이 우세했던 영남, 야당이 우세했던 호남을 제외하면 새누리당은 이러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충청, 강원에서 의석을 독식하고, 경기인천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반면, 야당은 서울지역에서만 다수제 효과의 덕을 본 셈이다.

2. 2012 대선의 쟁점

1) 선거 아젠다 : 정치/안보 선거인가? 경제민생 선거인가?

선거 패배를 계기로 야권에서는 민주통합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도성향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도층 끌어안기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당내 486을 중심으로 이념적 선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히 강하다.²⁾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 선거 아젠다는 이념적, 정치적 쟁점보다는 역시 경제민생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와 개선되던 경제인식이 2010년 지선 이후 2011년 민생대란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국가경제는 6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나빠졌다고 답하고 있어 경제위기에 대한 회고투표 경향이 강화되었던 2007년 대선 1차 패널조사에서의 52.4%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비율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4.9% 수준이며 대신 호전되었다는 여론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나라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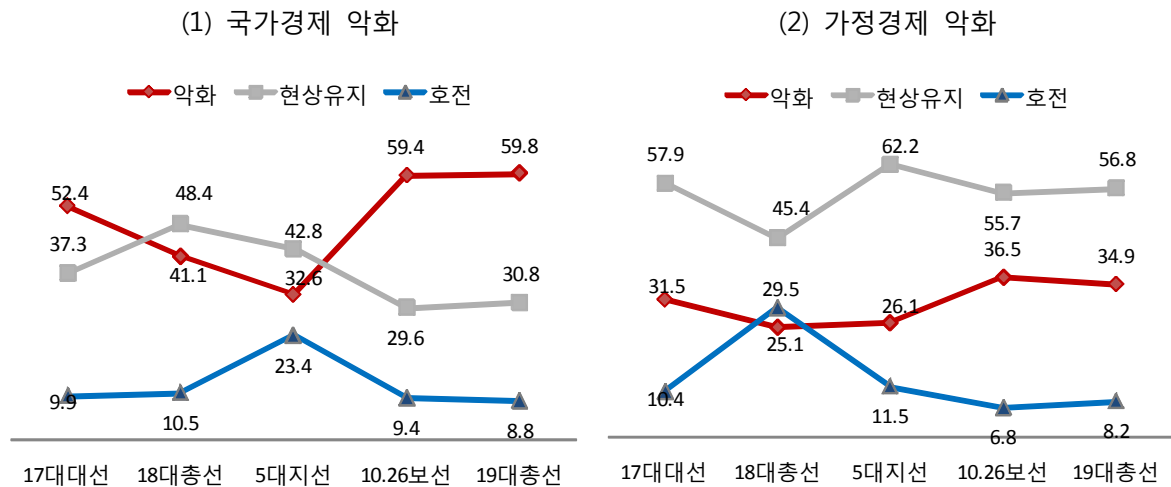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35.2%,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21.5%, 삶의 질 개선 11.4% 등으로 사회경제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는다. 정치개혁, 국민통합, 외교안보 과제를 꼽은 응답은 한 자리 수를 넘지 못했다. 각 과제별로 어느 정당이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 물어본 결과 경제성장, 국민통합, 국가안보 등의 과제는 새누리당이, 경제적 양극화 완화나 남북관계 개선의 경우는 야권이 더 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에 유리한 이슈를 부각시키지 못한 것도 야권 패배의 주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후 대선의 핵심 아젠다가 무엇이 되느냐가 선거 결과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좌클릭 민주당, 당내 중도의 반격.” (중앙일보 2012/4/19).





[그림 6] 경제인식 변화 추이



[표 4] 차기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및 문제해결 정당

해결정당	새누리당	민주통합	자유선진	통합진보	다른 정당	모름 무응답
최우선 국정과제						
경제양극화 완화(35.2%)	29.9%	39.1%	.7%	15.0%	3.2%	12.0%
경제성장(21.5%)	64.9%	17.0%	.6%	2.2%	1.4%	13.9%
삶의 질 개선(11.4%)	31.1%	34.2%	1.1%	16.8%	2.1%	14.7%
정치개혁(7.6%)	34.6%	32.3%	.8%	17.3%	1.6%	13.4%
국민통합(7.4%)	57.3%	22.6%	-	4.8%	1.6%	13.7%
남북관계 개선(4.9%)	34.6%	51.9%	2.5%	3.7%	2.5%	4.9%
국가안보 강화(4.4%)	73.0%	14.9%	1.4%	-	2.7%	8.1%
교육개혁(3.9%)	39.1%	31.3%	1.6%	12.5%	1.6%	14.1%
국제 경쟁력 강화(2.7%)	62.2%	26.7%	2.2%	2.2%	2.2%	4.4%

2) 박근혜 대세론, 재점화될까?

총선 수혜자 박근혜, 야당 대안 안철수 상승, 대망론 주춤한 문재인 정세

4.11 총선의 수혜자인 박근혜 위원장과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안철수 교수는 대선후보 다자구도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1차 조사 31.8%에서 38.8%로 급상승하고, 안철수 교수 역시 21.2%에서 24.4%로 상승한 반면 문재인 당선인은 14.8%에서 14.3%로 정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의 상승은 4.11 총선에서의 리더십 발휘에 대한 평가가 직접적인 계기로 보이며 새누리당 지지층 및 부동층 일부의 표를 흡수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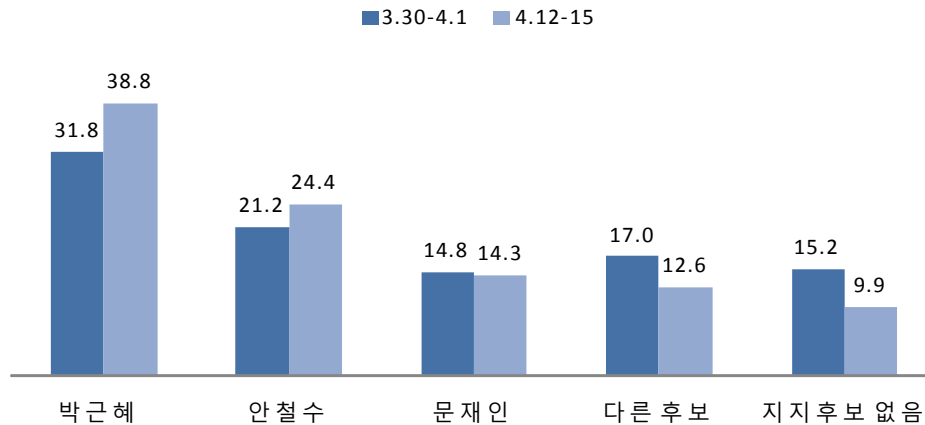
한편 안철수 교수는 부동층 보다는 총선 패배이후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당선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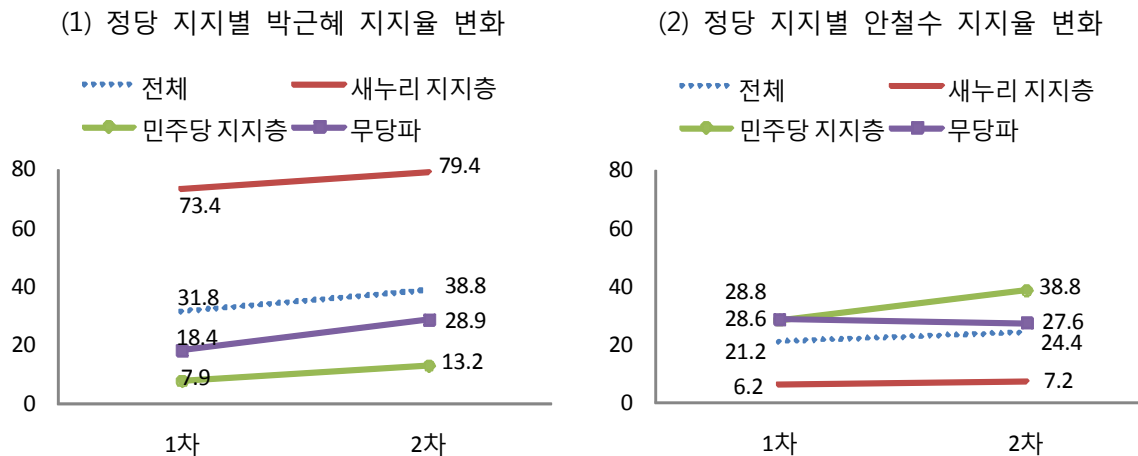
대한 기대가 정체하면서 안철수 교수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1차 민주당 지지층에서 28.6% 지지를 받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이들 중 38.8%로 안철수 원장 지지가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당선인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교수에 뒤처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7] 총선 전후 대선 다자구도 지지율 변화



주: 지지율 5% 미만 후보들은 다른 후보로 묶었음.

[그림 8] 박근혜/안철수 원장 정당 지지별 지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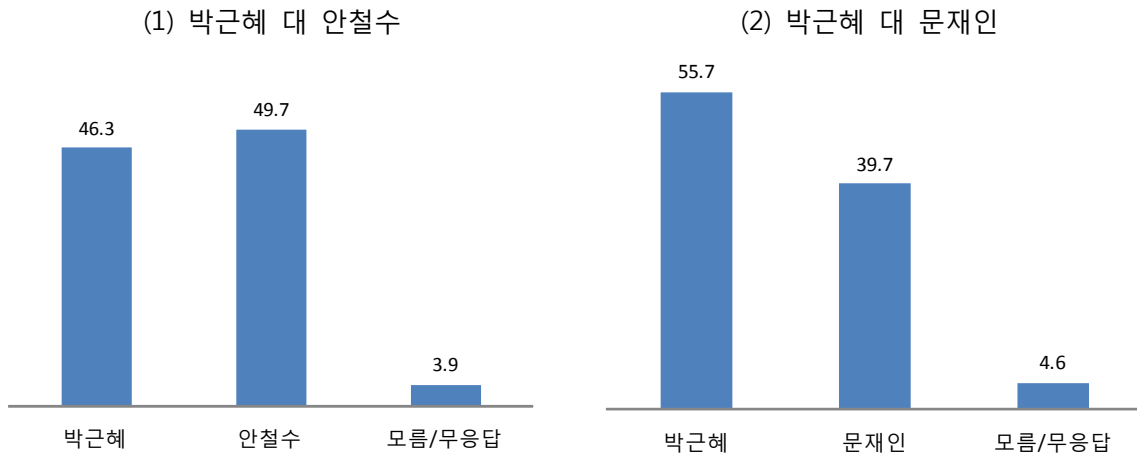
박근혜 대세론의 제약요인, 여전히 강한 보수 이미지

총선 승리와 이후 지지율의 급상승으로 박근혜 대세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1:1 대결구도로 보면 안철수 교수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 46.3%, 안철수 교수 49.7%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반면 문재인 당선자와의 1:1 대결에서는 박근혜 위원장이 비교적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 박 위원장 55.7%, 문재인 이사장 39.7%로 16%포인트 앞서나가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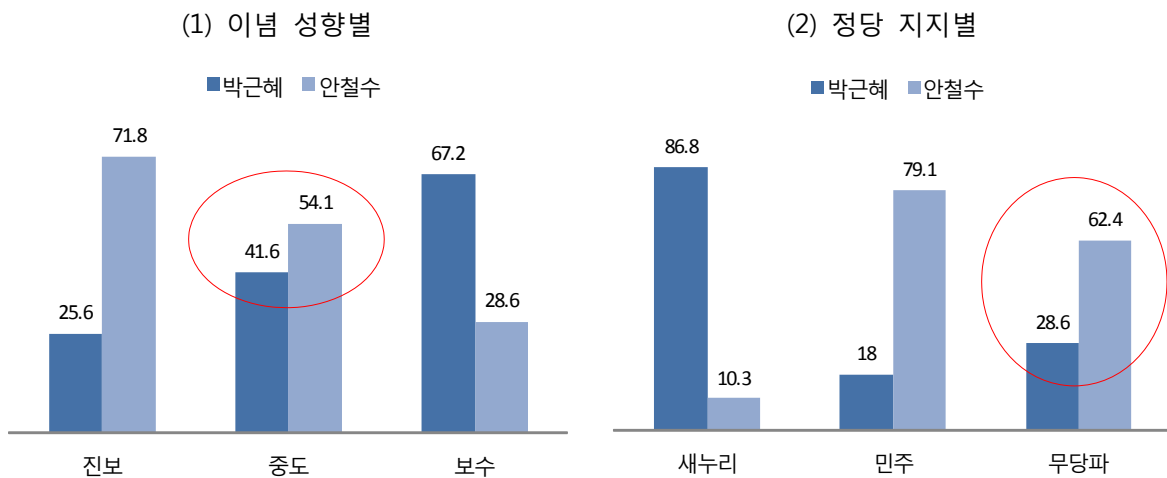


[그림 9] 1:1 대선구도 지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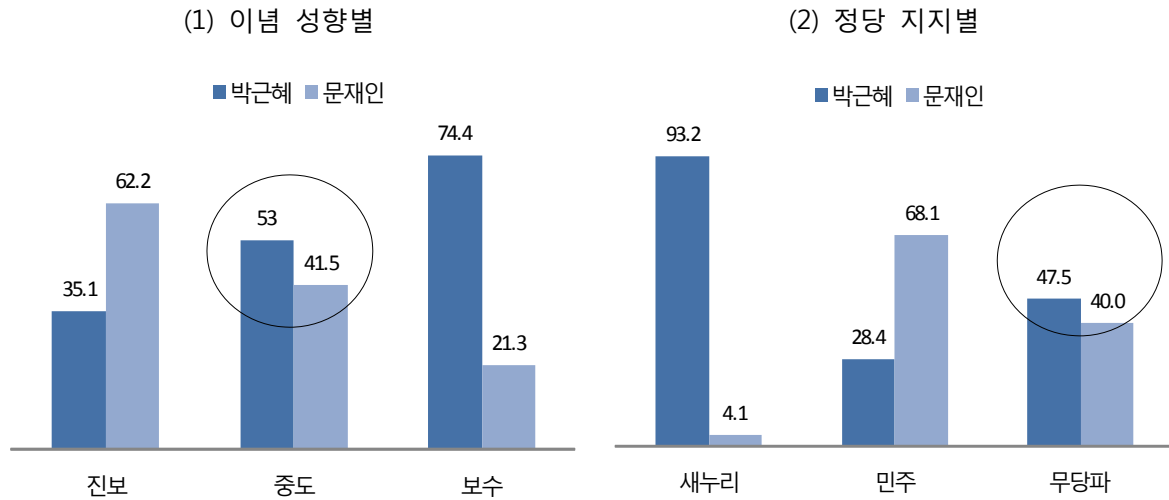
박근혜 위원장의 경우 안철수 원장과 대결 시 우위에 서지 못하는 것은 보수층에서의 강한 결집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도와 무당파 층에서 안철수 원장에게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념적 중도층에서 박 위원장 41.6%, 안철수 원장 54.1%로 뒤지고 있으며, 무당파 층에서는 박 위원장 지지 28.6% 대 안철수 원장 62.4%로 크게 뒤지고 있다. 반면 문재인 당선자와의 1:1 대결에서는 반대로 박근혜 위원장이 중도와 무당파 층에서 문재인 당선인을 앞서나가고 있다. 중도층에서 53.0% 대 41.5%로, 무당파 층에서도 47.5% 대 40.0%로 박 위원장이 문재인 당선자를 앞서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은 안철수 교수와의 대결에서, 문재인 당선자는 박근혜 위원장과의 경쟁력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역시 중도, 무당파 층에서의 열세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그림 10] 이념성향/정당지지별 박근혜 대 안철수 지지





[그림 11] 이념성향/정당지지별 박근혜 대 문재인 지지



유권자는 5.2점(중도보수)

박근혜 이념점수 7.1점, 안철수 4.3점, 문재인 4.1점

박근혜 위원장이 안철수 원장에 비해 중도층에서 크게 열세를 보이는 데에는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한 보수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스스로의 이념적 위치를 0점을 매우 진보, 5점을 중도, 10점을 매우 보수의 척도로 하여 물어본 결과 유권자의 평가점수는 5.2점으로 중도보수에 위치하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이념위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점수는 7.1점으로 같은 당 정몽준 후보 6.2점, 김문수 후보 5.6점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안철수 교수의 이념평가 점수는 4.3점으로 중도진보적 성향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재인 당선자는 4.1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의 후보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두관 지사 4.3점, 손학규 전대표는 4.9점으로 나타났다.

각 점수별 응답분포를 보면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념성향 분포에 비해 박 위원장에 대한 이념적 이미지 평가 분포가 상당히 오른쪽(보수적)으로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안철수 원장에 대한 평가는 중도로 보는 응답자가 다수를 점하는 가운데 대체로 진보로 평가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이념분포 및 유권자들과의 이념적 근접도를 보면 안철수 원장이 훨씬 유권자들과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 이념 평가에서도 새누리당은 7.2점으로 강한 보수성을, 자유선진당 5.7점, 민주당은 4.4점의 진보중도, 통합진보당 3.4점의 진보성향의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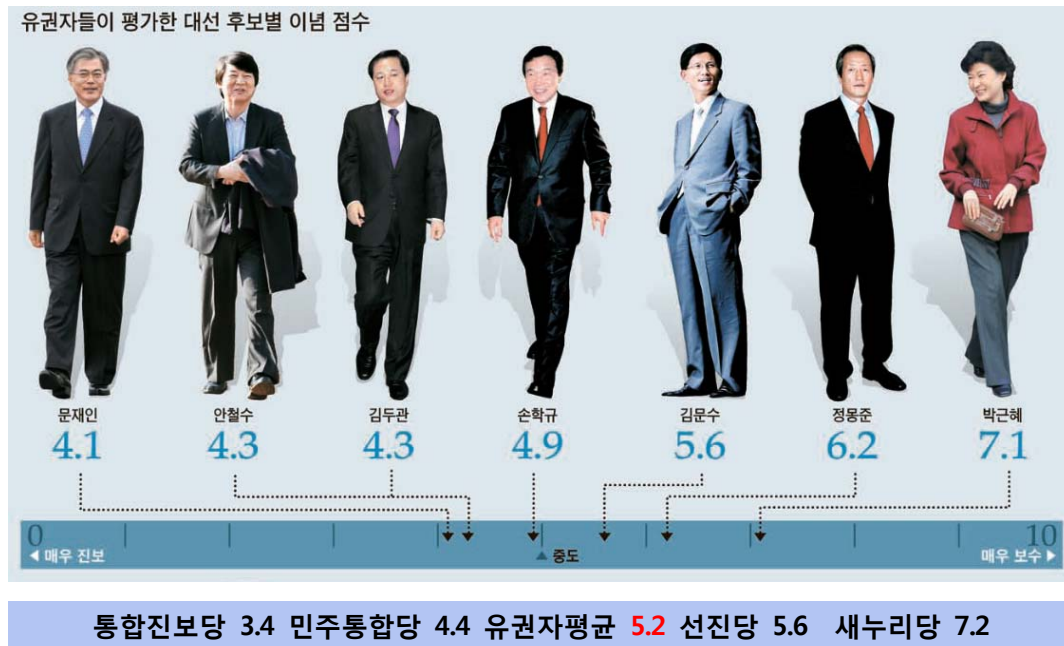
박근혜 위원장은 2010년 스탠퍼드대 강연 이후 복지노선을 강조하고 비대위 위원장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당규 개정 등을 통해 중도로의 포지션 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중도로의 포지션 이동 노력이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보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총선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이끌면서 박근혜 리더십의 힘을 과시하고 ‘신뢰와 원칙’의 브랜드를 강화시킴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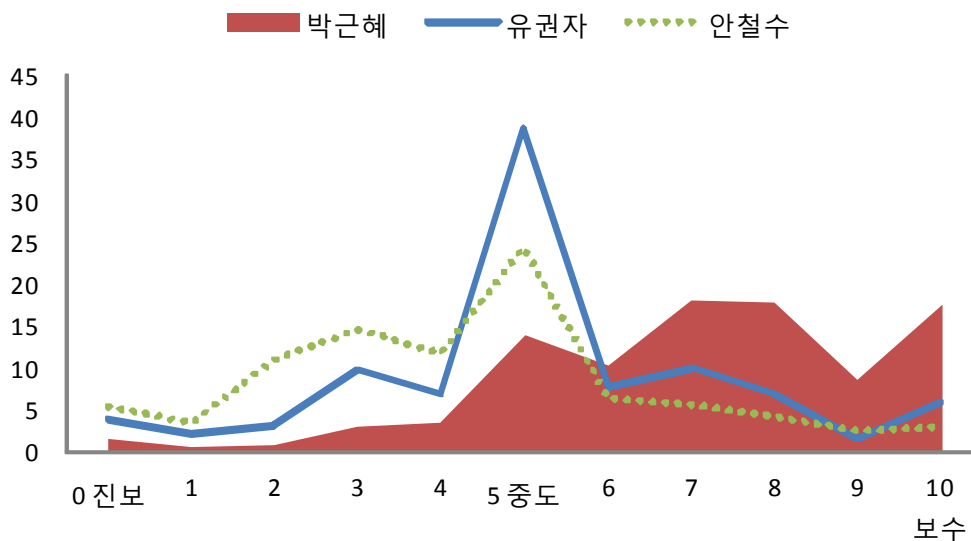
로써 강한 보수 이미지의 한계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철수 원장에게 중도 무당파 층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은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림 12] 주요후보 이념위치 평가



출처: 중앙일보

[그림 13] 유권자 이념 분포와 박근혜-안철수 이념평가 분포





3. 맺으며

필자는 선거 전 이번 4.11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론 여론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공천과정에 대 여론의 불만, 정권심판론을 떠받치고 있는 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한 이슈화 실패, 민간인 사찰 파문 폭로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응으로 인해 올 초 야권에 유리했던 국면이 여야 경합국면으로 전환되어 근소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정권심판론에도 동조하면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심리가 강한 “상충적 유권자” 들이 유권자의 다수(38%)를 점하고 있었는데 선거 막바지 네가티브 캠페인이 지배하면서 이들이 생각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높은 선거경합도 인해 여야 지지층의 높은 결집으로 2008년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상승했지만 2010년 지방선거 전후로 높아지고 있는 투표 참여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것은 이들의 투표불참이 주된 요인이라고 추측된다.³⁾

실제 투표에 참여한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은 여와 야 중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보다는 팽팽한 균형을 유지했고 야당에 비해 여당 지지,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높은 결집을 이루었던 것이 그 어떤 선거 보다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았던 4.11 총선이 결국 여대야소의 결과를 남기게 된 핵심 요인이었음을 이번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강한 보수 이미지는 앞으로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데 넘어야만 하는 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야당과 야당 후보들의 경우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이념위치(5.2점)를 기준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에 비해 훨씬 근접해 있었지만 안철수 교수를 제외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에 비해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 후 야권 내부의 중도노선을 둘러싼 논란은 문제의 초점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야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여야 지지층의 결집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결국 12월에 치러질 대선은 중간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누가 잡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념적인 이념논쟁 보다는 이들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강한 정치 불신과 사회적 불안감을 어떻게 다독이고 희망을 줄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은 선거 직후 “지난 4년간 새누리당은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실망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한껏 낮추었다. 야당의 경우 “여당이 고의사구를 내주려는 데 스스로 헛스윙을 해서 삼진 당했다”는 냉소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안팎에서 “야당이 오만했다는 평가는 보수언론이 씹는 논리”이며 “단군 이래 최대의 야당 의석수”라며 사실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대선레이스 초기 여야 간 “여론읽기 경쟁”에서 여권이 한발 앞서 나가는 형세다.

3) 정한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EAI 여론브리핑> 제 111호. (2012.4.9)





4.11 총선 특집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발간계획

1	2012-02호	장승진	19대 총선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2012. 4. 25
2	2012-3호	박원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2012. 4. 25
3	2012-4호	정한울	여론으로 본 4.11 총선 평가와 대선 쟁점	2012. 4. 25
4	2012-5호	이곤수	박근혜 대세론 가능한가?	근간
5	2012-6호	정원철	2040세대 표심과 SNS 영향력 분석	근간
6	2012-7호	이내영 · 정한울	여야 이념 이미지와 정책포지셔닝 전략 평가	근간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 · 대선 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6차 조사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2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4월 12 - 4월 15일 (4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666명
표본추출	지역·성·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2.4\%$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패널유지율	83.3% (1차 조사 2,000명 기준)

1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3월 30 - 4월 1일 (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패널 모집
표본추출	지역·성·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pm 2.2\%$
모집방법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임의번호걸기방식)+한국리서치 MS패널
조사기획	동아시아연구원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www.hrc.co.kr)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민전(경희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